

---

# II

## 통화신용정책 운영

1. 기준금리	55
2. 금융중개지원대출	57
3. 시장안정화 대책	59
4. 여타 통화신용정책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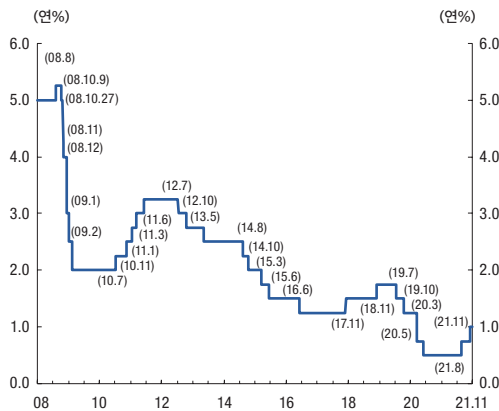


## 1. 기준금리

### 2021년 11월 연 0.75%에서 1.00%로 인상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세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0%로 0.25% 포인트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하였다.

그림 II-1. 한국은행 기준금리<sup>1)</sup>



주: 1) ( ) 내는 기준금리 조정월

자료: 한국은행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0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0.75%로 유지<sup>68)</sup>하고,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경제와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 투자가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둔화되었던 민간소비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견조한 수출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이후에도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가계대출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월 회의에서는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0%로 인상<sup>69)</sup>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GDP 성장률은 금년 중 4.0%, 내년 중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된 데다 지난해 공공서비스가

68) 총 7인의 출석위원 중 5인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2인의 위원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0.25% 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69) 총 7인의 출석위원 중 6인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1인의 위원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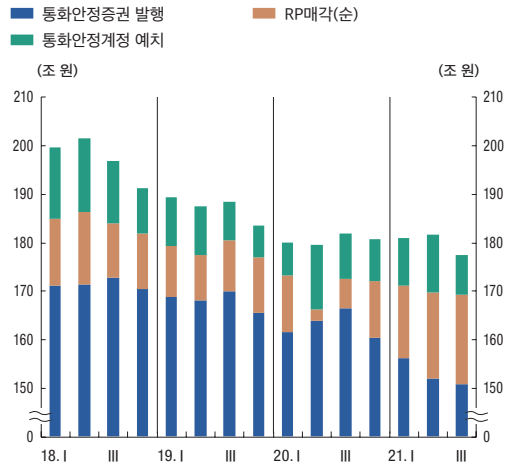
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3%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는데, 상당기간 목표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에는 종전 전망치(1.5%)를 크게 상회하는 연간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의 증가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앞으로도 경기상황 개선 및 금융불균형 상황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등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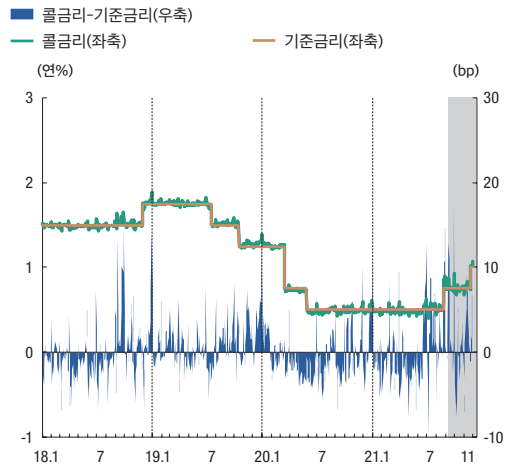
3/4분기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민간의 화폐수요 증가<sup>70)</sup> 등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한 데 이어 10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sup>71)</sup>과 통화안정계정 예치<sup>72)</sup>를 축소하는 한편 RP매각(순)을 소폭 확대<sup>73)</sup>하여 단기자금 수급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콜금리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2.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규모<sup>1)</sup>



주: 1) 평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 기준금리 및 콜금리



자료: 한국은행

70) 3/4분기 중 화폐발행잔액(평잔기준)은 9월 추석 연휴(직전 10영업일 간 4.8조 원 증가)의 영향 등으로 전분기대비 4.5조 원 증가하였다. 화폐발행액 확대에 의해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지준예치금이 감소하면 유동성 흡수 필요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71) 3/4분기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평잔 기준)은 전분기대비 1.1조 원 감소했으며 10월에는 전월대비 4.9조 원 감소하였다.

72) 3/4분기 통화안정계정 예치(평잔 기준)는 전분기대비 3.8조 원 감소했으며 10월에는 전월대비 0.6조 원 감소하였다.

73) 3/4분기 RP순매각(평잔기준)은 전분기대비 0.6조 원 증가했으며 10월에는 전월대비 0.8조 원 증가하였다.

## 2. 금융중개지원대출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9월 말에 운용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한시적 지원조치들을 예정대로 종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sup>74)</sup>에 대한 신규지원 및 무역금융 관련 신규취급액에 대한 지원<sup>75)</sup>을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종료<sup>76)</sup>하였다.

한편 8월 31일 운용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sup>77)</sup>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운용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다.

2021년 9월 9일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sup>78)</sup>하고 2021년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의 운용 한도를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3조 원<sup>79)</sup> 증액하기로 하였다.

2021년 12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1.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3.5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 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조 원, 소상공인 지원 6조 원이며, 한도 유보분 0.1조 원을 포함한 총 한도는 43조 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 금리는 연 0.25%이다.

74)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5조 원의 한도로 지원하였으며 운용기한은 2021년 9월 30일이다.

75)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1조 원의 한도로 지원하였으며 운용기한은 2021년 9월 30일이다.

76) 지원 종료 이후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한도 5조 원은 기 대출취급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내에서 계속 관리하고, 무역금융 신규취급액 지원을 위한 한도 1조 원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에 편입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77)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한다.

78)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의 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1년 9월 말에서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하였다. 양 지원 프로그램 모두 지원대상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지역분별로 해당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업 이외 업종도 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79) 증액에 필요한 재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한도를 활용하였다.

표 II-1. 금융증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 원, 연%)

프로그램	한도		금리	
	조정 전	조정 후		
무역금융지원	2.5	1.5 <sup>3)</sup>	0.25	
신성장·일자리지원 <sup>1)</sup>	13.0	13.0	0.25	
중소기업대출안정화 <sup>2)</sup>	5.5	3.5 <sup>4)</sup>	0.25	
지방중소기업지원	5.9	5.9	0.25	
한도 유보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0	13.0	0.25
	소상공인 지원	3.0	6.0 <sup>5)</sup>	0.25
	기타	0.1	0.1	0.25
합 계	43.0	43.0	-	

주: 1)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 (2017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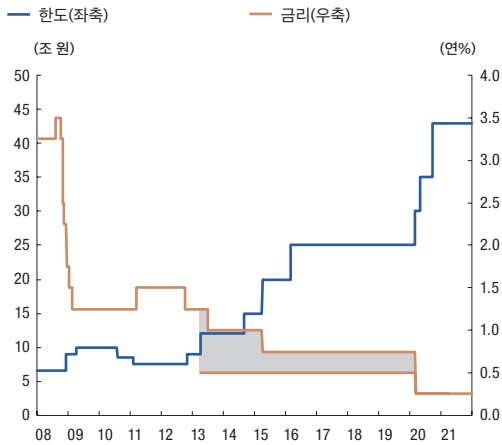
2)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기취급 잔액 등을 포함하여 지원

3) 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

4) 2021년 10월 1일부터 한도를 3조 원 감액(5.5조 원→2.5조 원)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한도를 1조 원 증액(2.5조 원→3.5조 원)

5)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 한국은행 금융증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sup>1)</sup>

주: 1) 명암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하았던 시기의 상·하한 구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 3. 시장안정화 대책

####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 및 중도환매 확대

10월 중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등으로 주요국 금리가 크게 오른 가운데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가 가세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채권 투자심리 개선 및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11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중도환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10월 28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1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을 10월 계획 대비 2.4조 원(9.0조 원 → 6.6조 원<sup>80)</sup> 축소하는 한편 중도환매 규모를 1.0조 원 확대(4.0조 원 → 5.0조 원)하기로 하였다.

####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지속

한국은행은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2021년 7월 23일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금의 재대출<sup>81)</sup>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 10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4.4조 원<sup>82)</sup>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표 II-2. SPV의 신용등급별 회사채·CP 매입 현황<sup>1)2)</sup>

(억 원, %)

신용등급	금액	비중
AA(A1)	12,200	27.8
A(A2)	25,691	58.6
BBB(A3)	5,920	13.5
합계	43,811	100.0

주: 1) 2021년 10월 말 기준

2) 액면금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80) 5주차가 없는 10월과 비교하기 위하여 11월 5주차 91일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0.7조 원)은 제외한 수치이다.

81) 2020년 7월 23일에 1.78조 원 규모로 실시한 제1회 대출의 만기가 2021년 7월 23일에 도래함에 따라 재대출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였다.

82) 회사채 3.1조 원, CP 1.3조 원을 매입하였다.

표 II-3. 코로나19 관련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

(11월 30일 기준)

	정책대응	주요 내용 <sup>1)</sup>
유동성 공급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 공급 실적 : 총 19.43조 원(2020년 7월 말 종료)
	비은행 대상 RP 매입	• 공급 실적 : 총 3.5조 원(2020년 3월 19일 1.0조 원, 3월 24일 2.5조 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 RP매매 대상기관 확대(2020년 7월 말 종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및 RP매매 대상증권 확대(2021년 3월 말 종료)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2021년 3월 말 종료)
	금융기관 담보여력 확충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용 인하(70% → 5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확대(2021년 3월 말 종료)
국채 및 회사채·CP 시장 안정	국고채 단순매입	• 매입 실적 : 총 17.0조 원 (2020년 3월·4월·7월·8월 각 1.5조 원, 9월 2.0조 원, 10월·11월 각 1.5조 원, 2021년 3월 2.0조 원, 4월 1.0조 원, 6월 3.0조 원)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 총 한도 : 10조 원 • 운용기한 : 2021년 2월 3일 종료 • 대출 담보 : 일반기업 발행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AA- 이상) 회사채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 규모 : 10조 원(시장상황에 따라 20조 원까지 확대) • 매입기한 : 2021년 12월 31일(6개월 연장 후 금년 연말까지로 추가 연장) • SPV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액 : 3.56조 원(누적 기준)
외환시장 안정	한·미 통화스왑	•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 만기 : 2021년 12월 31일(6개월씩 2회, 3개월 1회 연장)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 총 198.72억 달러 공급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국내은행(40% → 50%) 및 외은지점(200% → 250%)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에 대해 3개월(2020년 4~6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기간 제외 등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 금융회사의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 • 대상 채권 : 미 국채(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으로 확대)

주: 1) 음영 표시는 종료 시한이 도래한 대책

자료: 한국은행



## 4. 여타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 및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적 준비를 지속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차원의 대응방향도 모색하였다.

###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요 이슈 발생시 비상 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과 관련하여 9월 23일과 11월 4일에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 금융불균형 심화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 심화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하였다.

9월 「금융안정회의」<sup>83)</sup>에서는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자산가격 변동,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과도한 부채규모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 및 투자를 제약하는 부채의 임계수준 추정, 주요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 가계 및 기업의 부채수준에 대해 평가하였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LTV, 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다각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한편, 최근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확대 등 영업행태 변화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최근 저축은행 대출 급증의 배경과 이에 따른 잠재적 부실위험을 손실흡수능력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면밀히 점검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국내 금융·경제 안정 관련 주요 현안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였다.

###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누적된 잠재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 모니

83)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도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터링을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에 대한 부문검사 및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를 통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 은행의 대출 취급 및 건전성 관리 실태,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표 II-4. 공동검사 실시 현황<sup>84)</sup>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11월
6	5	6	2	6

주: 1) 실시 횟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또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상의 특기사항 등 경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기업대출 행태 변화 및 가계대출 취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기업대출에 대한 미시정보를 활용하여 기업대출분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점검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수검은행 앞 검사결과 설명회를 통해 한국은행 검사업무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정책 공조를 지속하였다.

## 글로벌 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IS, G20, ASEAN+3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협의체가 개최하는 화상회의 및 일부 재개된 현장(in-presence)회의에 참석하였다. 특히 BIS와 G20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공급 병목현상의 발생 원인 및 대응 방안, 빅테크 및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시스템 진입과 국가별 지급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행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의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년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sup>84)</sup>의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원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10월 Deputies(차관·부총재급) 회의에서는 LIBOR를 대체하는 CMIM 신규 참조금리를 결정하고 역내통화 자금지원을 제도화하는 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84) 동 회의는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다.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및 CBDC 관련 연구 지속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sup>85)</sup>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1년 9월 한은금융망에 대해 PFMI 준수 여부, 운영리스크 대응 역량과 수준 등 업무지속성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한은금융망은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9월 금융투자회사(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또한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의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CPMI-IOSCO 회의 참가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감시·규제 논의와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감시·규제 논의<sup>86)</sup>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국외송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연계<sup>87)</sup>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적합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ATM 설치대수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ATM 활용방식 개선<sup>88)</sup>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sup>89)</sup>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적 준비를 지속하였다. 특히, 금년 8월 착수한 CBDC 1단계 모의실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발행, 유통, 환수 등 CBDC의 기본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될 2단계 모의실험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결제<sup>90)</sup>,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등 확장 기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IT기업 등을 대상으로 「CBDC 추진 현황 설명회」(11월 12일)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지급

8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 공동으로 기존의 지급결제에 관한 국제기준들을 통합하여 2012년 4월에 제정한 지급결제분야의 새로운 국제기준이다. CPMI-IOSCO는 PFMI 준수를 위한 보충적 지침으로서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 지침」(2017년 7월), 「CCP(Central Counterparty) 복원력 추가지침」(2017년 7월) 등 추가적인 국제기준을 제정하였다.

86) CPMI 등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해 지급결제 국제기준(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지침의 시장협약안(Application of the PFMI to stablecoin arrangements, 2021년 10월)을 공개하였다.

87)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직접 연계될 경우 국외 송금시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감소하므로 G20, BIS 등 국제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88) ATM 데이터베이스(DB) 및 정보제공 인프라(모바일 웹)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다.(2021년 11월)

89) 지존예치금, 결제성 예금 등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말한다.

90) 인터넷 등 통신 연결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결제를 말한다.

결제제도 컨퍼런스」(11월 18일)를 개최하는 등 금융권, IT기업, 학계, 연구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대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후변화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기후변화 대응방향 검토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차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고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다.<sup>91)</sup>

동 보고서에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 및 금융시스템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점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활용가능한 정책수단 검토<sup>92)</sup>를 포함한 한국은행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은행은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제주체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사·연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보유 정책수단 및 기능에 기

91) 자세한 내용은 금년 10월 29일 발표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한국은행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보도자료)

92)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대출 및 지급결제제도, 공개시장운영 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외화자산운용시 기후변화 관련 가중치를 높여 친환경 부문의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참고 II-1.

### 코로나19 피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배경 및 주요 내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21년 10월 금융중개지원대출<sup>1)</sup>을 통해 이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개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신설하였다. 총 한도 5조 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2차례 증액<sup>2)</sup>을 통해 지원한도를 총 13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지원기간은 2020년 9월 말에서 2차례 갱신을 거쳐 2021년 9월 말로 연장되었다.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되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실적의 50%를 지원<sup>3)</sup>하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은행 대출실적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도입 시 지원한도는 3조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지원기한은 2021년 3월 말에서 1차례 갱신을 통해 2021년 9월 말로 연장되었다.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주요 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sup>1)</sup>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총한도 <sup>2)</sup>	최초 도입 (2020년 3월)	5조 원		
	1차 증액 (2020년 5월)	10조 원	최초 도입 (2020년 9월)	3조 원
	2차 증액 (2020년 9월)	13조 원		
지원기간 <sup>2)3)</sup>	최초 도입 (2020년 3월)	~2020년 9월 30일	최초 도입 (2020년 9월)	~2021년 3월 31일
	1차 연장 (2020년 9월)	~2021년 3월 31일		
	2차 연장 (2021년 3월)	~2021년 9월 30일	연장 (2021년 3월)	~2021년 9월 30일
지원비율	50~100%		100%	
업체당 한도 <sup>2)</sup>	최초 도입 (2020년 3월)	10억 원	최초 도입 (2020년 9월)	3억 원
	1차 증액 이후 (2020년 5월)	5억 원		

주: 1) 지원업종, 지원비율 등 세부사항은 지역본부별로 일부 상이

2) ( ) 안은 의결일 기준

3) 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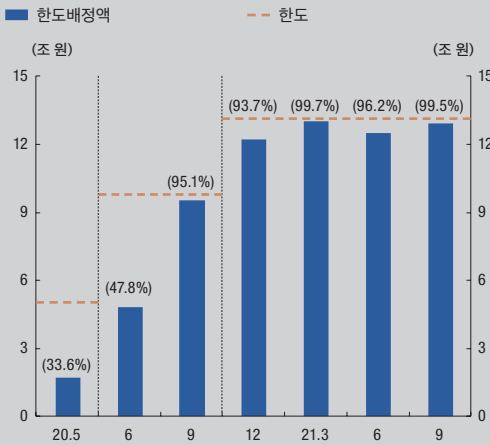
1)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효율적인 자금중개를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고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2020년 5월 및 10월에 각각 5조 원, 3조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다.

3) 단,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6~10등급)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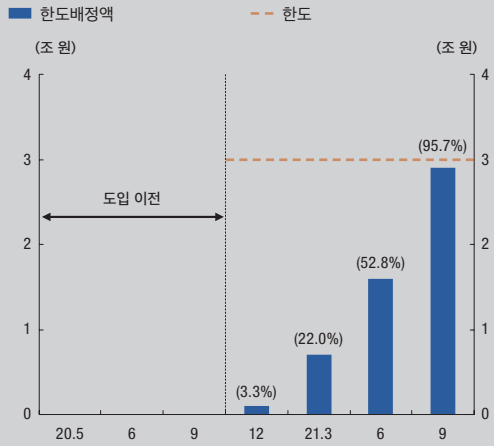
2021년 9월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금액은 12.9조 원으로 총 지원한도(13조 원)의 99.5%가 소진되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한국은행 지원 금액은 2.9조 원으로 총 지원한도(3조 원)의 95.7%가 소진되었다.

코로나19 피해기업<sup>1)</sup> 지원 배정액 및 한도 소진율<sup>2)</sup>



주: 1) 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대상 기업 기준(이하 동일)  
 2) ( ) 내는 한도 소진율  
 자료: 한국은행

소상공인<sup>1)</sup> 지원 배정액 및 한도 소진율<sup>2)3)</sup>



주: 1) 한국은행 '소상공인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준(이하 동일)  
 2) 2020년 10월 도입(2020년 12월부터 배정)  
 3) ( ) 내는 한도 소진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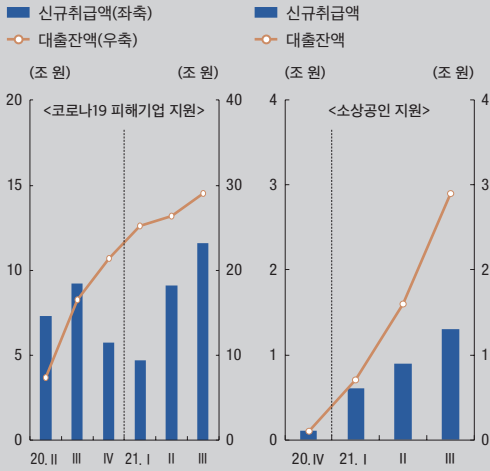
한편 2021년 9월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따른 은행의 대출취급액(잔액)은 29.0조 원이며 동 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129,395개,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2억 원이다. 신용등급별로는 중신용(4~6등급) 비중이 58.8%이다.<sup>4)</sup>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은행의 대출취급액(잔액)은 2.9조 원이며 동 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24,571개,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1.2억 원이다. 중신용(4~6등급) 비중은 41.5%이다.

4) 2021년 9월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대출의 신용등급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고신용(1~3등급)	중신용(4~6등급)	저신용 <sup>1)</sup> (7~10등급)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0.4%	58.8%	30.8%
소상공인 지원	19.6%	41.5%	38.9%

주: 1) 무등급 포함

## 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대출취급액



자료: 한국은행

### (최근 코로나19 피해 취약부문 지원 강화 배경)

금년 들어 중소 제조업 경기는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업황 회복이 제약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대면서비스업의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였다.

##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sup>1)2)</sup>

(%)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서비스업	-2.0	-4.5	-3.4	-4.7	0.3	5.0	3.4
음식숙박	-16.5	-16.9	-15.6	-24.6	-13.1	1.5	-1.3
여가서비스	-22.2	-40.2	-33.1	-33.3	-18.0	20.6	7.3
개인서비스	-9.9	-7.4	-5.0	-10.4	-1.8	0.3	-0.4

주: 1) 전년동기대비

2) 서비스업 전체는 중소기업 기준, 세부업종은 대기업 포함

자료: 통계청

특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7월 이후에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sup>5)</sup>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 고정비(인건비, 임차료<sup>6)</sup> 등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황이 둔화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소상공인 체감BSI<sup>1)</sup>

	2021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체	55.8	53.6	32.8	34.8	57.6
음식점업	54.7	55.5	25.4	29.4	51.6
개인서비스업	55.5	46.9	22.5	26.8	54.8
서비스·오락관련업	47.6	46.2	25.1	22.7	44.3

주: 1) 소상공인의 경기체감 정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하여 응답값 별로

0~200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응답비중으로 가중평균하며, 100이상은

경기 호전, 100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중소기업벤처기업부

5) 전국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업종인 음식점의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증감률은 2021년 7월 -20.6%, 8월 -21.2%로 나타났다.(자료: 여신금융협회)

6) 2019년 기준 소상공인의 79.3%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었으며 평균 월세는 127만 원 수준이었다.(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완화하였던 통화정책 기조의 순조로운 정상화<sup>7)</sup>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sup>8)</sup>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자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해 선제적이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존에 운용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피해 취약부문 지원 강화 주요 내용)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된 금융중개 지원대출(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의 운용기한 연장, 운용방식 변경,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는 지원방안을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1년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의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2021년 9월 말 → 2022년 3월 말)하였다. 그리고 각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을 기존 전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변경하였다.<sup>9)</sup> 이와 함께 종전과 달리 양 프로그램의 중복 수혜를 허용하였다.<sup>10)</sup> 끝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의 한도를 3조 원 증액하였다.

### 코로나19 피해 취약부문 지원 강화 주요 내용<sup>1)</sup>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sup>2)</sup>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총 한도	13조 원(종전과 동일)	6조 원(3조 원 증액)
지원업종	서비스업 중심 (단, 지역별로 추가 가능)	서비스업
지원기간 <sup>3)</sup>	~2022년 3월 31일	
지원비율	50~100%	100%
업체당 한도	5억 원(종전과 동일)	3억 원(종전과 동일)
기타사항	중복수혜 불가요건 폐지	

주: 1) 2021년 9월 9일 개편 내용을 정리

2) 지원업종, 지원비율 등 세부사항은 지역본부별로 일부 상이

3) 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

자료: 한국은행

운용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운용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대출금리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대출이 각각 지난해 3월과 10월부터 취급된 점을 고려할 때 운용기한 연장으로 은행들은 기존 대출 만기도래시 동 자금을 다시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운용방식 변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리고 지원한도 확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금리감 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7) 한국은행은 2021년 중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종료(2021년 2월)하고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2021년 7월)하였다. 8월부터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8) 11월 25일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였다.(0.75%→1.00%)

9) 다만,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지역별 경기상황을 점검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장이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도 지원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10)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중복 수혜를 제한하였다.



